

학문적 '내공' 유감없이 발휘한 미국 연구서

《세계와 미국》

이해영 | 한신대 국제관계학과 교수

이삼성 교수는 누구나 인정하는 대표적인 미국 연구자다. 그가 이미 상당량에 이르는 미국관련 저서 목록에 최근 또 한권의 책을 추가했다. 그렇게 많은 미국유학파가 있음에도 미국전문가가 드문 이 희한한 학계 현실에서 그는 더욱 돋보인다. 우리에게 미국은 누구인가. 아마도 그는 이 화두와 맞서 족히 10년은 넘게 씨름했을 게다.

최근 NMD/TMD 문제로 미국은 다시 우리에게 거부하기 어려운 무엇으로 다가왔다. 1980년대, 당시 세계사적으로도 보기 드문 '반미항쟁'의 함성이 전국을 울린 지 10여년, 남은 것은 무엇인가. 그 치열했던 '상상의 전쟁'에서 우리는 무엇을 얻었나. 일부는 정치인으로, 일부는 벤처사업가로, 일부는 떠돌이 봉급쟁이로, 대다수는 사상을 버렸고 대신 생활을 얻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남는 것은 참담한 자괴다. 미국은 의연하고, '우리'는 진압됐다. 21세기, 다시 미국의 세기가 운위되는 요즘, '원위치'에서 다시 보는 미국. 그나마 이교수가 남아 자리를 지켰다. 그러나 그는 1980년대식의 반미주의자는 아니다. 승미, 친미, 용미(用美), 반미로 이어지는 한국 사회의 대미 인식 지형도상에 단순히 배열하기 어려운, 그렇지만 '반미' 뒤에 항상 '감정'을 덧붙이는 — 다분히 잘못된 — 우리네 언어 습관에 비춰 반미 '실천이성'을 대변하는 연구자라 할 것이다.

미국 연구 10여년 성과 집대성

《세계와 미국》(한길사)은 모두 10장으로 이뤄진, 800쪽이 넘는 방대한 양이다. 지은이 스스로 대중 독자와 사귀기 위해 노력하지만 어지간한 인내와 나름의 전문적 관심이 없어서는 읽어내기 어렵다. 국제정치 이론과 실물분석 모든 영역에



이삼성 지음
한길사/A5신/836면/30,000원

전방위적으로 개입해서 평소의 내공을 유감없이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왜 이렇게 길어야 하는지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다. 좀더 간결하게 자신의 테제를 앞장세우고, 이를 입증하기 위해 관련 논자들의 글을 재구성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의문이 든다.

저자는 '새로운 세기의 다른 시작을 위하여'라는 멋진 제목을 단 서론에서 이렇게 말한다.

“세계질서의 구조와 향방을 이해하는 것은 결국 우리 자신과 인류의 운명을 결정하는 힘과 논리를 이해하는 것이다. 우리에게 요청되는 이 같은 인식은 어떤 하나의 이념적 지표만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다. ... 나는 미국과 세계에 관한 연구는 단순한 정치사나 외교사적 서술일 수는 없다는 생각을 해왔다. 우리의 존재양식, 우리의 사유양식, 결국 우리 자신의 문명 그 자체에 대한 연구일 수밖에 없다.”

그렇다. 21세기에 미국문제는 환경, 평화문제와 더불어 '전지구적 문제'며, 나아가 우리에게겐 실로 존재의 문제다. 무식이 인간에게 도움을 준 적은 한번도 없다는 마르크스의 일갈처럼 미국을 제대로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미국을 제대로 알기 위한 탐구여행의 안내자로서 저자는 다음과 같은 '투어'를 마련하고 있다. 미국의 전지구적 역할의 본질(1장), 20세기 미국의 세기가 정립되는 과정(2장), 미국의 세계 인식의 형성과 변화(3장), NMD구상의 비판(4장), 핵군축문제(5장), 미국과 인권(6장), 코소보 사태와 미국의 군사개입(7장), 유엔과 미국의 역할비판(8장), 생태·환경위기와 관련된 미국의 태도(9장), 헌팅턴류 문명충돌론비판(10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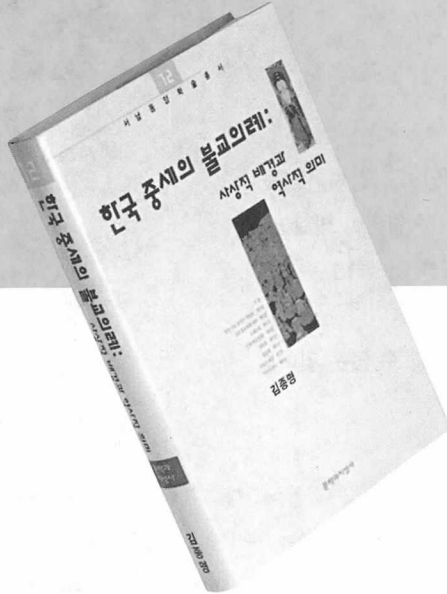
정치·군사적 측면에 치중해

특히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NMD/TMD 문제와 관련해 부시외교의 본질에 대해 반복적으로 강조하는,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다같이 미국의 국익을 추구하는 데에는 차이가 없다. 다만 그들이 추구하여야 할 국익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 국익을 어떤 방식으로 추구할 것인가 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을 뿐이다” 같은 관점은 대단히 중요하다. 우리의 '햇볕 정책'과 관련, 우리 사회에 만연한 '클린턴=O, 부시=X' 식의 이분법은 얼마나 고지식한가. 추구형태가 다른 '제국적 과잉 확장'(overstretch)일 뿐인데 말이다. 나아가 NMD에 대한 지은이의 상론 역시 현실점에서 몹시 소중한 인식자원이다. 물론 독일통일과 관련된 분석에는 선뜻 동의하기 어렵고, 다루는 대상이 정치-군사적 측면에 집중돼 마땅히 있어야 할 제국적 질서의 경제적 기초가 전혀 다뤄지지 않았다는 점은 책의 양에 비춰 읽는 이를 허전하게 한다. 제3세계의 입장에서 '제3차 세계대전'은 핵전쟁일 수도 있지만, 지금 당장은 '이자전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말이다.●

선명한 입장제시만큼 문제점도 적지 않아

《한국 중세의 불교의례 : 사상적 배경과 역사적 의미》

조명제 | 부산대 강사



김종명 지음
문학과지성사/A5신/408면/16,000원

한국의 중세에 해당하는 고려시대의 불교는 단순히 종교적인 기능만이 아니라 사회 전반의 구조와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있었다. 불교의례는 이런 경향이 잘 드러나는 대표적인 연구분야다. 하지만 이에 대한 연구는 그다지 활발하지 못한 실정이다. 이런 점에서 《한국 중세의 불교의례 : 사상적 배경과 역사적 의미》(문학과지성사)의 출간은 상대적으로 소홀하게 다뤄진 불교의례 연구를 좀더 활성화시키는 계기가 되리라 생각한다.

학제적 연구방법 돋보여

이 책에서 지은이는 소재도량, 인왕회, 연등회, 팔관회 등 4대 불교의례를 통해 각 의례의 문헌적 기원, 역사적 전개과정과 의례 절차에 대해 실증적으로 밝히고, 그 특징과 성격을 검토했다. 이어 불교의례의 사상적 배경에 대해 풍수지리설, 조상숭배설, 천견제이설 등 중국인들의 전통적 사유방식에 기초를 두고 있었다고 말한다. 아울러 지은이는 불교의례가 왕권을 강화하거나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기여했다는 통설과는 달리, 왕의 정신적 위안 및 왕실의 기복 수단에 불과한 것으로 그 역사적 의미를 파악하고 있다. 즉 불교의례는 국가의례가 아니라 왕실의례일 뿐이며, 특정 의례가 선행되는 것은 왕의 개인적 취향에 달려 있으며, 그 선행 경비도 왕실이 담당했다고 주장한다. 나아가 지은이는 불교의례가 길례대사(吉禮大祀)에 대한 보조 의례에 불과하며, 불교가 국가종교의 위치를 차지한다는 통설을 비판하고 있다.

이 책에서 지은이가 한국불교의 특징을 ‘통불교’나 ‘호국불교’로 이해하는 현 학계의 통설을 비판적으로 바라본다는 점, 연구방법론으로서 역사적, 종교적, 철학적 측면을 함께 다뤄 학계간의

연구를 시도해본 것은 분과학문적 입장이 강한 우리 학계의 불교학 연구방법론을 좀더 다양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아울러 이런 문제제기는 뚜렷한 쟁점이 없는 불교학계의 연구풍토에서 어느 정도 반향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지은이의 입장이 선명한 만큼 문제점 역시 적지 않게 드러나고 있다.

첫째, 지은이가 불교의례의 사상적 배경은 중국인들의 전통적 사유방식이며, 불교적 사유방식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은 단선적인 이해다. 지은이는 불교교학을 초기불교의 그것으로 한정하고 있는데, 이런 이해방식은 불교를 근본불교에만 국한하는 문제점이 있으며, 한국불교는 인도불교가 아니라 주로 중국화된 불교를 통해 이해하고 수용된 역사적 과정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효사상, 풍수사상, 천견설 등을 표방하는 것이 불교와 무관한 것이 아니며, 불교의례의 현실적인 효용성이라는 측면이 반영된 논리라는 것을 감안해야 할 것이다.

둘째, 불교의례의 역사적 의미에 대한 이해방식은 시각이나 연구방법론적인 측면에서 적지 않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지은이는 ‘호국불

교’ 설을 뒷받침하는 근거를 불교의례에서 찾는 기존의 통설을 부정한다. 필자 역시 한국불교의 특징을 ‘호국불교’로 파악하는 견해는 재검토돼야 하며, 불교의례의 사회적 기능을 호국적인 측면으로만 확대·해석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지은이와 같이 불교의례의 국가적 성격을 축소하거나 부정하는 입장 역시 지나친 견해가 아닌가 한다.

논지 뒷받침하는 문헌적 근거에 문제 있어

한편 지은이의 논지는 문헌적인 근거로서 《고려사》의 전체적인 신뢰성을 받아들이는 데서 출발하고 있다. 그러나 《고려사》는 그 편찬과정에서 불교관계 기사를 누락하거나 축소시켜 고려 불교사에 대한 자료로서는 기본적인 한계가 있다. 즉 《고려사》의 불교의례 관계 기사는 왕실과 관련된 사실만을 기록한 것이며, 각종 소문 자료에서 왕의 장수와 왕실의 영원 무궁함을 기원하는 것은 의례적인 표현에 불과한 것이라는 문헌적 한계나 의미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각종 의례가 특정 시기별로 어떻게 선행되며, 그 사회적 배경이 무엇인가를 좀더 구체적으로 분석해야 하며, 호국적인 측면인가 아닌가가 하는 시각에 머물기보다 사회구조적인 측면에서 검토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불교의례가 왕실의 입장이나 왕의 개인적 취향에 달려 있으며, 나아가 고려불교가 국교적인 위치에 놓여 있지 않았다는 결론은 자칫 한국사의 후진성을 강조하는 식민사학의 입장으로 돌아가는 우를 범할 수 있다. 고려불교의 성격은 왕실 차원에서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적 차원이나 피지배층을 포함한 전 계층을 대상으로 검토하고 해석해야 할 것이다. ●